

이슈브리프

No. 2026-06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한국에의 시사점

최은미 연구위원

이동규 연구위원

2026-01-21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이하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무력공격 발생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存立危機事態)” 발언 이후¹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내 미국 동맹네트워크의 역할 확대를 견제하고 양안관계에서의 우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역내 안보질서 수호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고, 경제·안보·지리적으로 일본의 이해가 걸려있는 대만문제에 대해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중일 각국과 대만과의 관계 외에 각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미국과의 관계, 역내 주도권 확보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중일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정세와 한국의 국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고려해 현재 중일 갈등에 연루되지 않고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중국 및 일본의 불신과 외교적 압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대만 문제에 관해 △ '하나의 중국' 존중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 국제법 준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명확한 입장을 공표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만문제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편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만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근거로 한국이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가치 협력국(value based partner)임을 내세우며 북핵 대응, 공급망 재편 등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국의 대일 압박과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경제 복원력을 기반으로 공급망 다변화, 대체 기술 및 제품 개발, 경제 강압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분석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1. 중일 갈등의 현황과 전개, 그리고 파급효과

2025년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는 “대만해협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국이나 지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비상 상황을 뜻하는 표현으로, 2015년 안보법제 개정으로 도입되었다.²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이기도 하다. 역대 내각은 대만 유사 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사태와 직접적으로 결부해 언급하기를 피해왔는데, 다카이치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중국 측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거셌다. 쉘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개인 SNS 계정에 "죽음의 길", "들이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글까지 올리면서³ 외교적 파장은 증폭되었다. 중일 간 외교적 마찰은 경제·문화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해제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했다.⁴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중국 항공 데이터 '항반관자 DAST' 자료에 의하면, 2026년 1월까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가운데 약 40.4%에 해당하는 2,195편의 운항이 취소되었고,⁵ 중국은 자국 주요 여행사에 방일 관광객 수를 2026년 3월까지 기존의 60% 수준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⁶ 이와 같은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와 같은 '한일령(限日令)' 조치에 대해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 NRI)는 일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7,900억 엔(한화 약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⁷ 일본의 다이와종합연구소(Daiwa Institute of Research, DIR)는 일본의 실질 GDP 가 약 0.1%, 장기화 시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⁸

중일 갈등은 실제 군사 현장에서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12월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남동쪽 공역에서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⁹ 일본은 이를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위"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자국 군용기의 활동이 "정상적 훈련"이라며, 오히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의 정상적 훈련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미쳤다고 주장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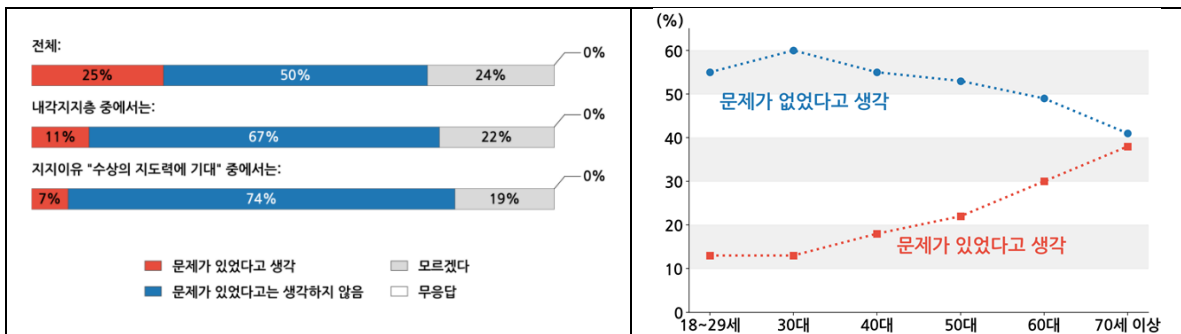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6일 군사 용도나 군사력 강화에 쓰일 수 있는 희토류를 포함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일본에 금지한다고 발표했다.¹¹ 중국은 이번 조치가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이중용도 품목의 특성상 군사와 민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민간 거래까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번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GDP 0.11% 하락과 약 6,600억 엔(약 6조 원)의 손실,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GDP 0.43% 하락과 2조 600억 엔(약 24조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¹² 희토류에 대한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¹³ 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중일 간의 외교 갈등이 문화 및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및 경제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전략 변화와 대중국 강경노선

다카이치 발언 이후 중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일 갈등이 한창 격화되던 시기인 2025년 11월 30일 발표된 TV 도쿄와 일본경제신문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내각 지지율은 75%로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 1%p 상승했고,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 사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응답이 55%,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보다 높게 나타났다.¹⁴ 이와 같은 경향은 진보 성향의 언론사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11.22-11.23)에서도¹⁵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18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다카이치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Q.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출처: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11.22-11.23) 참고해서 재구성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이처럼 다카이치의 발언이 일본 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중국의 요구대로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다카이치 발언의 기저에는 △ 국제정치 속에서 일본의 위치 변화, △ 대만 문제의 중요성, △ 국내정치적 이유라는 세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1) 역내 안보질서의 '적극적 행위자'로¹⁶ 존재감을 높이는 일본

현직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는 점은 주목받았지만,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과 그 기저에 깔린 인식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 왔으나, 외교적 파장과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식 석상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은 회피하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왔다.

다카이치가 이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미일동맹 기반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며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일본은 스가,¹⁷ 기시다¹⁸ 내각을 거치면서 미일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대중 견제,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의 수위를 높여온 바 있다. 더욱이 다카이치 발언은 대만 지원을 '일본 단독 개입'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대만 방어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사례'로 제시한 것인데, 이는 동맹이 작동하는 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⁹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대만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 하에 안보분담을 자임함으로써 동맹 내 일본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부터 GDP 대비 방위비 2% 조기 달성,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이전원칙 제한 완화 등 안보정책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안보질서 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위자로 나선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다.

(2) 대만의 중요성과 다카이치 총리의 親대만 행보

일본에게 있어 대만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분쟁 확대 시 일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특히, 일본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약 90%가 대만 해협 인근의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를 통과한다. 일본은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갖춘 경제대국이지만,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고,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원유가 통과되는 항로가 바로 대만해협과 대만 남쪽의 바시해협(Bashi Channel)이고, 이 항로의 위협은 곧 일본 경제의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⁰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이유 외에, 최근 부상하는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대만은 일본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급망과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의제이다. 여기에는 다카이치의 친대만 행보와 전

경제안보담당대신으로서의 경력도 결합된다. 다카이치는 취임 전부터 대만과의 접촉 행보가 많았던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2025년 4월에 대만을 방문하여 반도체, AI, 에너지 등 경제안보 의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²¹

(3) 국내 보수층 결집을 통한 지지 기반 확보

한편,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국내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즉, 다카이치의 적극적인 안보 태도를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여론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국내정치적으로 보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강경·보수 성향 유권자와 자민당 지지층에게 ‘중국에 물러서지 않는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카이치의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고, 지지율 상승이 강경 메시지로 이어지는 패턴이 형성된다. 비록 다카이치가 이후 “종래 정부의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점으로 삼는다”며²² 발언의 수위를 낮추기는 했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보인다.

자민당 내 강경우파 세력과 젊은 보수층은 중국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던 과거 일본 외교에 피로감을 느껴왔다. 따라서 중국의 원색적인 비난과 비합리적인 대응 조치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은 ‘강한 일본’을 갈망하는 이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자민당 내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26년간 이어진 공명당과의 연립정권 해체 후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은 다카이치에게 높은 국민적 지지는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가늠자이자, 당내 이견을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정치적 안전판으로 기능한다. 즉, 대외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외교적 부담을 키우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리더십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지지층 결집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는다.

3. 중국의 對일본 압박 의도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정책과 차별적인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GGI)를 발표하여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자유무역 수호 등을 강조해 왔다. 그런 점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일본 압박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경제 강압(economic coercion)과 중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확산하고, 중국이 추구해 온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지역 내 안보 이슈에 대한 미국 동맹네트워크의 역할 확대 견제

2025년 12월 5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는 미국 본토 방어를 핵심으로 하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의 안보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명시했다.²³ 지난 1월 3일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반구 안보 우선 기조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가 양국 간 극한 대결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²⁴ 향후 대만해협 안정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은 지역 내 미 동맹 및 협력국들이 미국의 의도대로 대만문제 및 지역 안보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일본이 미일동맹 체제하에서 일본의 안보 부담 확대를 모색한다면, 한국 등 다른 미 동맹과 협력국들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만문제를 넘어 여러 안보 이슈에 대해서 해당 국가들이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만문제, 더 나아가 다른 안보 이슈에서 미 동맹 및 협력국의 개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 양안관계(중국-대만관계)에서의 우위 확보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이하 라이칭더)은 일본산 수산물을 먹는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중일 갈등을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8월 대만민의기금회(臺灣民意基金會) 여론조사에 의하면, 라이칭더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3.3%로 크게 하락했다.²⁵ 2025년 12월 말에는 중국국민당(Kuomintang, 이하 국민당)과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 이하 민중당)이 제출한 대만 정치사상 최초의 현직 총통 탄핵안이 대만 입법원을 통과했다.²⁶ 이런 대만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라이칭더의 행동은 중일 갈등을 활용해 대만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중국의 일방적 행태를 부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은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이하 민진당) 등 대만 독립을 모색하는 세력에게 주변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대만 정치에서 민진당의 지지층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6년 11월에는 대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의 패배는 단기적으로 라이칭더 정부의 반중 정책 추진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이나 제3정당의 승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²⁷ 중국은 라이칭더 정부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2025년 4월과 12월에 중국은 대만 해협 봉쇄 훈련을 통해서 대만인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양안관계 악화의 책임을 라이칭더 정부에게 전가하는 한편, 라이칭더 정부와의 대화 없이 국민당 등 야당과의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양안 교류를 위해서 민진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일본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굴복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이는 라이칭더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우위로 이어질 수 있다.

(3) 4연임을 준비하는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 확보

시진핑은 미중 전략경쟁, 중국 경기 하방, 사회 불안정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고 중국 내 애국주의를 자극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 왔다. 대만과의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2026년 신년사에서 시진핑은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면서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다.²⁸ 비록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를 내세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유예를 얻어냈지만, 중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2027년 4연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며 국내정치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은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纪念日, 이하 전승절)' 80주년이다. 중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2025년 9월 대규모의 전승절 행사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731', '난징사진관', '산허웨이정(山河为证)' 등의 일제의 침략을 다룬 영화를²⁹ 개봉하며 중국공산당의 항일 업적을 홍보했다. 중국 내 반일 정서가 고취된 상황에서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강한 중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해 온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4.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

중국은 지역 내 미 동맹의 역할 확대를 견제하고 양안관계에서의 우위와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역내 안보질서 수호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고, 경제·안보·지리적으로 일본의 이해가 걸려있는 대만문제에 대해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중일 각국과 대만과의 관계 외에 각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미국과의 관계, 역내 주도권 확보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중일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정세와 한국의 국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일 갈등으로 인한 중국인의 일본 관광 제한이 국내 관광업계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으나,³⁰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가 초래할 비용이 훨씬 크다. 이미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지역국가 간 외교적 교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6일 중국이 단행한 대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는 한중일 공급망의 긴밀한 연결성을 고려할 때 한국 산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³¹ 일본 내 소재, 부품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기면 일본으로부터 이를 수입하는 한국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중일 간 군사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것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해상 물동량의 33.27%가 통과하는 대만해협 항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하루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³²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GDP가 23.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당사국인 대만(-40%)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이다.³³ 공급망 마비와 자동차·전자 산업의 위축은 물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안보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력 재배치에 따른 한반도 방위 공백과 그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5. 정책 제언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안보 및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 1월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시진핑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공동으로 대항한 한중 간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중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선택의 압박이 커질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일에 중국 중앙방송(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대만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고,³⁴ 1월 12일 일본방송협회(NHK) 인터뷰에서는 “(중일 갈등은)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거리를 두었다.³⁵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고려해 현재 중일 갈등에 연루되지 않고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중국 및 일본의 불신과 외교적 압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대만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설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 ‘하나의 중국’ 존중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 국제법 준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만문제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편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만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대만문제에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입장 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근거로 한국이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가치 협력국(value based partner)임을 내세우며 북핵 대응, 공급망 재편 등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근거로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이 스스로의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국제 인권법의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민감 현안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대일 압박과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금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에 굴복했던 일본은 이후 90%였던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60%까지 낮추고³⁶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다. 그런 만큼 일본은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경제 복원력을 기반으로 공급망 다변화, 대체 기술 및 제품 개발, 경제 강압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1월 시진핑의 국빈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은 상대국을 압박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경제 강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한국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분석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 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¹ 당시 발언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태,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만을 완전히 중국 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단순한 해상교통로 봉쇄일 수도 있고, 무력행사일 수도 있다. 가짜 정보, 사이버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발생한 사태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실로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조문대로다.” 時事通信. “【詳報】台湾有事と存立危機事態を巡るやりとり(2025年11月7日)” <https://www.jiji.com/jc/v8?id=20251107yosan>.

²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아베 내각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이다. 당초 일본은 자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닥친 경우에 한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 개념 도입 이후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대 내각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되,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왔다. JBPRESS. “【やさしく解説】「存立危機事態」とはどんな状況か、日中対立に火を付けた高市発言の核心部分とは”(2025.12.16)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92270>.

³ 연합뉴스. “오사카 中총영사, '대만 유사시=日위기' 인식 비난..."죽음의 길"" (2025.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021900073>.

- ⁴ 연합뉴스. "中, 日에 추가 보복 카드...日수산물 수입 재개 보름만에 또 중지(종합)" (2025.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086852073>.
- ⁵ 이 가운데 46개 노선은 2025년 12월 23일~2026년 1월 5일까지 2주간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특히 상하이 푸둥-홍차오 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14개 노선이 전면 중단되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그렇게 많았는데...중국인 한명도 안보여' 中서 일본행 항공편 2000건 '무더기 취소'" (2025.12.23)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2308502058747>.
- ⁶ 머니투데이. "'중국의 목표, 방일 관광객 -60%'...다카이치는 미국 방문 추진" (2025.12.26)
<https://www.mt.co.kr/world/2025/12/26/2025122610134891829>.
- ⁷ 木内 登英. "【訂正】中国政府の日本への渡航自粛要請で日本の経済損失は1.79兆円、GDPを0.29%押し下げ" (2025.11.18) <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20251118.html>.
- ⁸ Daiwa Institute of Research. "China's Request to Refrain from Traveling to Japan Expected to Reduce Japan's Real GDP by 0.1% - 0.4%" (2025.11.27)
https://www.dir.co.jp/english/research/report/analysis/20251127_025440.html.
- ⁹ 防衛省. "中国軍機による自衛隊機へのレーダー照射について" (2025.12.7)
<https://www.mod.go.jp/j/press/news/2025/12/6a.html>.
- ¹⁰ 중앙일보. "'中, 日전투기 두 차례 레이더 조사'...日 "위험한 행위" 강력 항의" (2025.1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007>.
- ¹¹ 한겨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850여가지 수출 금지...희토류 7종 포함" (2026.1.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238489.html>.
- ¹² 이코리아. "중국, 이중용도 품목 일본 수출 통제 ...국내 산업 영향은?" (2026.1.9)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81>; 野村総合研究. "中国が日本にレアアース輸出規制を導入した場合の経済損失" (2025.11.28)
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20251128_2.html.
- ¹³ YTN. "일본 총리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용납 못 해"" (2026.1.11)
http://ytn.co.kr/_ln/0104_202601111112190146.
- ¹⁴ テレ東BIZ. "高市内閣支持75% 高水準を維持 テレ東・日経11月世論調査" (2025.11.30) <https://txbiz-tokyo.co.jp/readings/2724>.
- ¹⁵ 毎日新聞. "当然? 軽率? 高市首相の「台湾有事発言」 世論調査から見た「民意」" (2025.12.8)
<https://mainichi.jp/articles/20251206/k00/00m/010/216000c>.
- ¹⁶ 최은미.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 다카이치(高市)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Issue Brief 2025-39. (2025.12.23). 아산정책연구원.
- ¹⁷ 최은미. "미일정상회담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Issue Brief 2021-13. (2021.4.27). 아산정책연구원.
- ¹⁸ 최은미. "기시다-바이든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일관계에의 함의," Issue Brief 2022-19. (2022.7.12). 아산정책연구원.
- ¹⁹ The Diplomat. "Takaichi's Taiwan Remarks: Much Ado About Nothing?" (2025.11.18)
<https://thediplomat.com/2025/11/takaichis-taiwan-remarks-much-ado-about-nothing>.
- ²⁰ The Epoch Times. "[분석] 일본이 '대만 안보'를 자국의 생존 문제로 여기는 이유" (2025.11.22)
<https://www.epochtimes.kr/2025/11/729116.html>.

- ²¹ 中華民國總統府. "總統接見日本前經濟安全保障擔當大臣高市早苗眾議員
盼臺日攜手提升雙邊經濟韌性與產業競爭力為印太區域繁榮發展開創新局" (2025.4.28)
<https://www.president.gov.tw/News/39205>.
- ²² 朝日新聞. "高市首相、台湾有事めぐり「従来の立場を超えたと受け止められ反省」" (2025.12.16)
<https://www.asahi.com/articles/ASTDJ2D79TDJUTFK00GM.html>.
- ²³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5.12.0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 ²⁴ 2025년 7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 중남미 순방 시 뉴욕 경유 불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 2025년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대중국 관세 유예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 ²⁵ 菱傳媒. "台灣民意基金會民調 / 民怨如火山爆發！賴清德滿意度剩33.3% 本命區台南也失守" (2025.08.12)
<https://rwnews.tw/article.php?news=22335>.
- ²⁶ South China Morning Post. "Taiwan's lawmakers vote to start impeachment process against William Lai" (2025.12.26)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337841/taiwans-lawmakers-vote-start-impeachment-process-against-william-lai?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
- ²⁷ 아산정책연구원. "2026 아산국제정세전망: 무질서의 세계" (2025.12), pp. 62-63.
- ²⁸ 新华社. "国家主席习近平发表二〇二六年新年贺词" (2025. 12.31)
<https://www.news.cn/politics/leaders/20251231/00c3feccf5424d3c90bccbb1519f47ae/c.html>.
- ²⁹ '731'은 일본 731부대의 생체실험 고발을, '난징사건'은 난징 대학살을, '산허웨이정'은 중국인들의 항일 역사를 담고 있다.
- ³⁰ YTN. "중일갈등 격화에 반사이익?...불안한 줄타기" (2025.11.22)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511222309145484_005.html.
- ³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2026.1.8); 서울경제. "제2 요소수·소부장 사태 재연되나...中·日 생산 차질땀 韓 제조업 흔들" (2026.1.7)
<https://www.sedaily.com/NewsView/2K77LO34Y9>.
- ³² 허재철.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2022-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³³ 연합뉴스. ""中, 대만 침공시 한국 GDP 23% ↓ ...대만 이어 두번째로 타격 커"" (2024.1.10)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002300072>
- ³⁴ JTBC.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방중 앞두고 '대만 문제' 답해" (2026.01.03)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8283>.
- ³⁵ KBS뉴스. "이 대통령, NHK 인터뷰 '중일 갈등' 거리두기...오늘 한일 정상회담" (2026.01.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57042>.
- ³⁶ The Japan Times. "China blinks again following dual-use export threat earlier in the week" (2026.01.09)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6/01/09/economy/china-dual-blink/>.